

환경보전의 길 동행 반세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9년 5월 17일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정책을 전담할 행정기구를 신설하게 되었다. 나는 모 언론기관으로부터 “환경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요청 받았다. 나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영국의 환경부는 주택·지방행정·공공사업을 총괄하는 종합부처이며, 일본의 환경청은 외청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첫 책임자는 장관급 국무위원일 뿐만 아니라 당시 부수상이 겸직하는 등, 책무와 위상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신설될 환경청의 소관 업무는 보건·위생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획·자연보호·대기질보전, 수질 보전은 물론 폐수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수자원 업무까지 포괄하는 종합 행정부처로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설 환경청은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출범함으로써 기존 환경 관련 업무마저 총괄하지 못하는 위상으로 출범하였다.



노재식
한국환경정책학회 고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그렇지만 40년이 흐른 오늘날의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된 행정 및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처로 자리를 잡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물론 리 일원화와 관련된 세 가지 법률을 바탕으로 통합 물관리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부단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내가 처음 바꿨던 모습과 역할에 근접해가고 있으니 반갑고 흐뭇할 뿐이다.

그뿐인가! 1992년 말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설립되었고, 1997년 가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동개발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 개편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싱크 탱크의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KEI가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함께 환경 관련 전문학술지인 『환경정책』을 공동발간함으로써 학술적 기반을 다져 정책연구개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관산학(官産學) 협력체제의 지극히 바람직한 모범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를 환경보전이란 한 길을 동행한 사람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KEI와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환경정책의 건실한 이론과 창의적 지식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물관리 일원화라는 새롭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면서 큰 성취를 이루기를 바라는 바이다.